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정체불명 득표율’ 파장

비공개 속 예비경선 득표율 문자·게시물 급속 확산 민주 “허위정보 무관용 대응”...경로 조사·엄정 조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 경선이 끝난 직후 후보별 득표율로 추정되는 미확인 수치가 담긴 문자와 온라인 게시물에 무차별 확산되면서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공개가 원칙인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 직후부터 사실상 ‘숫자 경쟁’으로 변신했다. 일부 수치는 서로 다르게 유통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허위 정보 유포 경위와 의도, 향후 본격선에 미칠 영향까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

양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 경선 진출자 5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후보가 본격선에 올랐고, 정준호 후보는 탈락했다. 애초 당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발표 전후로 후보 6명의 득표율이 소수점 단위까지 적힌 출처 불명의 자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문제는 이 자료가 단순한 풍문 수준을 넘어 캠프 관계자와 당원들 사이에서 사실상 ‘내부 정보’처럼 소비됐다는 점이다. “받은 문자” 형식으로 재전송된 자료에는 후보별 득표율이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이후 비슷한 형식의 다른 수치까지 연달아 등장했다. 같은 후보의 득표율이 자료마다 크게 엇갈리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진위를 둘러싼 혼선은 더 커졌다. 특정 후보가 앞섰다는 식의 해석이 덧붙고, 이를 다시 지지층이 퍼 나르면서 예비경선 직후 본격선 구도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각 캠프의 반응도 엇갈렸다. 일부 후보 측은 개표 결과가 후보별로 개별 통보되는 구조여서 타 후보 득표율을 알 수 없다며 허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민

형배 후보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가 경선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확한 득표율 공개와 유포 경위 조사를 요구했다. 주철현 후보 측도 출처 불명의 문자 확산이 특정 후보의 순위를 굳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거론했다. 반면 다른 일부 캠프에서는 유포된 수치와 실제 통보받은 결과가 큰 흐름에서 비슷하다는 취지의 반응도 흘러나오면서 논란은 더 증폭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 당규는 예비경선 단계에서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본격선 진출 여부만 발표할 것도 같은 이유다. 본선에 오른 후보들 사이의 불필요한 서열화를 막고, 이후 경선 과정에

서 전략적 풀림이나 표심 왜곡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데, 이번에는 그 비공개 원칙 자체가 허위 정보 유포의 통로처럼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의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공개 원칙을 악용한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선관위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경선 결과 비공개라는 제도적 악용에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당원과 사·도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질서 교란 행위”이라며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득표율 비공개 원칙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악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당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경선은 관리당원 100%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치러졌고, 본격선은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4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 행사에서 주요 내·외빈들과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행정통합 500억 추정 반영 건의

국회·민주당에 광역통합 1호 출범 필수예산 확보 요청 정보시스템 통합·공공시설 정비 등 5개 핵심사업 설명

전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필요한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20일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500억 원 규모 예산의 추경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위원 부지사는 이날 민주당 정재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청와대 비서관실 등과 면담 및 통화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국고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 지역 통합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중도성장 정책의 상징적 모델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 실무준비담당도 국회의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가 제시한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합 167억 원 △안내표지판 정비 28억 원 △공부 일원화 53억 원 △공공시설물 정비 242억 원 △청사 재배치 10억 원 등이다.

강위원 부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안정적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광주시와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정 협의와 국회 특·지방중도성장 정책의 상징적 모델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남도,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총력

국회포럼...하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와 전략 모색 원료공급 인프라 구비·해외 진출 용이 등 최적지 부각

전남도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동 상황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도정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와 공동으로 ‘전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부의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지정 공모를 앞두고 전남 여수 산단 일원의 지정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계 전문가,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전남의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뜨거운 열망을 결집했다.

개회식에선 전남 화학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특화단지 유치 의지를 담은 ‘지정 당위성 확산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전남 여수가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심장이자 공급망 안보의 최적지임을 천명하며, 반드시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다지는 기념촬영으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이어 발표 세션에서는 국내 화학산업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과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

중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가 ‘국내 화학산업 위기 현황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규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부장 자립 육성이 국가적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필요성’에 대한 두 번째 발표에서는 여수 국가산단의 독보적인 원료 공급 인프라와 현재 조성 중인 적량지구,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의 혁신적 확장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전략이 공개됐다.

기존 산단과 신규 지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광양항을 통해 글로벌시장으로 즉시 뻗어나갈 ‘완결형 소부장 생태계’의 적지임을 입증되는 자리가 됐다.

포럼의 대미를 장식한 토론회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실질적 전략 방안을 모색했

다. 토론자들은 여수 산단의 숙련된 공정 노하우와 신규 단지의 최신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때,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는 점에 입을 모으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저가 공세와 중동상황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화학산업은, 산업의 기초체력인 소부장을 키워야 변화의 파고를 버틸 수 있다”며 “정부(산업통상부)가 찾는 소부장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를 실현할 곳은 바로 검증된 생태계와 역동적인 확장성을 모두 갖춘 전남 여수”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상반기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진행해 오는 6월 최종 지정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국회 포럼을 기점으로 지정 당위성을 대외에 확산시키는 등 공모 선정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어업·여객선 면세유 ‘유가정책 사각지대’ 놓여”

서삼석 “유류비 폭등에 섬 주민 이동권 중단 위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천)은 지난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한 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 제품가격(MOPS)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ℓ 기준 17만6000원, 리터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달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격차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



고 행정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지면서 어민과 섬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오는 26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사상자 74명

실종자 14명 모두 숨져...경찰 등 합동감식 예정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연락 두절됐던 14명이 모두 죽임으로 돌아왔다. 이번 화재는 부상자까지 포함해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대형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화재가 급속히 확산한 원인으로 공장 내부 절삭유와 기름때, 임의로 마련한 ‘2층 복층’ 구조 등 여러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안전공업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현재까지는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까만 연기는 계단을 통해 2~3층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가공 공정에 사용하는 절삭유 등이 건물 곳곳에 묻어있어 확산이 빨랐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분석했다.

대부분 근로자가 한가로움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점심시간 때 갑자기 퍼진 화염에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미처 도착하기 전부터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긴박하게 몸을 피한 이들도 있었다.

순식간에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내렸다. 이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헬기까지 투입돼 화재에 물을 뿌리는 총력 대응 결과 불은 오후 11시 48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8시간 만에 실종자 수색이 모두 끝나면서, 사망자는 14명이 됐다.

경찰과 검찰은 전남 수사팀을 꾸려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관계 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은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국장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정책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청와대 국제경

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성오 기자

동 시대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청와대 국제경